

합격생 추천의 글

기출회독을 반복하다보면 문제와 답이 익숙해져서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걱정과 의구심이 들 때 OX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고,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객관식 기출을 공부할 때에는 전 지문을 다 알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풀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OX 지문으로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공부가 가능했고, 판단력과 순발력을 길러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- 2021 국가9급, 지방9급 최종합격 김민지 -

시험이 몇달 남지 않았을때, 행정학의 방대함 속에서 헤매던 저는 압축 교재와 OX 파이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OX파이널은 지문 자체가 아주 대표성이 있고 단순히 해설 뿐 아니라 관련된 개념 요약까지 있어 시험 하루전날 전 범위를 훑어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저는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저의 약점을 파악하였고, 틀린 지문은 여러번 회독하여 눈에 익혔습니다. 이 과정은 실전시험에서 빠르게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. 그만큼 저에게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기에 압축교재와 함께 꼭 추천합니다! 다들 파이팅하세요!

- 2021 국가9급, 지방9급 최종합격 전지원 -

1 행정의 개념 B

☆ 01 결정은 가치나 정치와 연관되고, 집행은 사실이나 행정과 연관 된다.

[결정-가치-정치
집행-사실-행정

0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.

..... 본질이다.

☆ 03 W. Wilson은 「행정의 연구」에서 행정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가 아닌 경영과 같다고 하였다.

W. Wilson : <행정의 연구(1887)> 에서 정치행정이원론 주장

04 오늘날 행정은 정부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공급을 의미한다.

..... 의미하지 않는다.

☆ 05 Goodnow는 행정을 국가의사의 결정(표현)이라고 하였다.

..... 집행(실천)이라고 하였다.
Goodnow는 <정치와 행정(1900)>에서 정치 (결정)와 행정(집행)의 엄격한 분리 주장

2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의 행정 A

☆ 01 요금재를 시장에 맡기면 자연독점 문제로 실패한다.

[모든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실패하는 이유]
공공재 : 무임승차, 과다·과소공급 때문
요금재 : 자연독점 때문
공유재 : 과잉소비와 비용회피로 인한 비극 때문

☆ 02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이다.

..... 경합성과 비배제성을

03 공유재를 시장에 맡기면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문제가 생긴다.

적정수준의 공급 X

04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 이하 또는 이상으로 공급된다.

..... 사회적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.

☆ 05 의료, 교육 등 가치재는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사적재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.

[비용 : 분산-작게 느껴짐] 압도
편익 : 집중-크게 느껴짐

☆ 06 공유재는 비용은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집중되어 크게 느껴져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.

04 계급제는 전반적으로 융통성과 신분보장이 약한 제도이다.



..... 강한 제도이다.

☆ 05 계급제, 업관주의, 개방형 인사제도는 인사권자의 재량과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시킨다.



[인사재량 O : 계급제, 업관제, 개방형
but 계급제 ≠ 업관제 ≠ 개방형]

06 계급제는 해당직무에 책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.



계급제 [해당직무에 책임자 임용보장 X
융통성이 높아 적재적소배치 O]

07 계급제는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직무급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.



직위분류제는
[계급제 : 생활급
직위분류제 : 직무급]

4 직위분류제 A

01 실적주의, 과학적 관리론, 직무급 등은 미국 직위분류제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.



실적주의 + 과학적관리론 + 직무급요청 = 미국의 직위분류제 확립에 영향

☆ 02 직무의 종류,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.



..... 직위의 군은 직급이다.
[직급 : 종류 · 곤란도 유사
등급 : 종류는 상이, 곤란도 유사
직무등급 : 곤란도만 유사(종류 언급 X)]

☆ 03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보수를 줄 수 있는 횡적인 직위의 군을 말한다.



04 직무평가에서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위와 직위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 해당한다.



[서열법 : 직위와 직위 비교
요소비교법 : 대표직위와 비교] 상대평가

☆ 05 점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를 사용하고, 분류법은 직무 평가기준표를 사용한다.



분류법은 점수법은
[등급기준표 : 분류법
평가기준표 : 점수법] 절대평가

☆ 06 직위분류제는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.



..... 확립에 불리하다.
[직위분류제 : 신분보장 X, 직업공무원제 X
계급제 : 신분보장 O, 직업공무원제 O]

☆ 07 직위분류제는 잠정적인 업무로 구성된 불확실한 직무상황에 적합한 제도이다.



..... 부적합한 제도이다.
직위분류제 [불확실한 직무상황 X (by 세분류)
환경대응력 O (by 개방형)]

☆ 08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구조로 환경대응성이 높다.



직위분류제 [환경대응성 O (by 개방형)
공직경직성 X (by 개방형)
인사융통성 X (by 세분류)]

- ☆ 02 5급 이상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.
- 03 법령, 조례,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에 포함은 시킬 수 있지만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☆ 04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05 행정부의 정부 측 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.
- 06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리한다.
- 07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.
- 08 6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과 특정직 중 10년 경력 미만의 의무직, 경감 이하의 경찰,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.
- 09 2022.1.1. 현재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 및 교육 공무원(교원 제외)도 「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.
- 10 2022.1.1. 현재 퇴직 공무원도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.



..... 가입할 수 있다.
공무원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
(2021.7.6. 「공무원노조법」 개정 시행)



고용노동부장관은
노조설립신고수리 : 고용노동부장관
노조전임동의 : 임용권자
정부측 교섭대표 : 인사혁신처장



2019.12 법률 개정으로 경찰, 소방도 가입 가능



[공무원노조 가입대상(2021.7.6. 시행)]
[종전] [개정]
일반직 - 6급 이하 전직급
특정직 - 6급 이하 상당 외무·소방·교육(전직급)
외무직만 교육(전직급)
별정직 - 6급 이하 상당 전직급 상당
퇴직자 - X O



- ☆ 07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대고객관계도 인간화될 수 있다.
- ☆ 08 정보화가 되면 분권화가 촉진되지만 집권화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.
- 09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정보지원시스템은 EDI이다.
- 10 정보자원 간의 관계를 연결·정리한 설계를 정부참조모형이라고 한다.
- ☆ 11 전자정부(행정정보화)기본계획은 5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다.
- ☆ 12 빅데이터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집합을 말하며, 크기, 속도, 다양성이 특징이다.
- 13 정부24는 G2C, 온나라행정시스템은 G2G, 나라장터는 G2B에 각각 해당한다.
- 14 초지능성, 초예측성,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과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.
- ☆ 15 「인사혁신처 예규」상 탄력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형, 근무시간선택형, 집약근무형, 재량근무형이 포함된다.
- ☆ 16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(구 국가정보화기본계획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, 정보기술아키텍처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각각 수립한다.
- 17 전자정부 1.0은 유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만, 정부운영패러다임 1.0은 직접방문을 기반으로 한다.
- 18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.



.....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비인간화될 수 있다.



정보화 { 집권화 촉진 X
분권화 촉진 O
집권화 촉진될 수도 O



..... ES(전문기체계)이다.
EDI = 전자문서 유통체계 = 전자자료 처리체계
... 정보기술아키텍처라고 한다.
정부참조모형 :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 한 것



..... 비정형화된 데이터집합을
3V { Volume : 크기
Velocity : 속도
Variety : 다양성(정형 + 비정형)



나라장터 = 전자조달시스템
G2B : 기업과의 전자거래(나라장터 등)
G2C : 국민과의 전자거래(정부24 등)
G2G : 정부내 전자거래(EDI 등)



..... 근본적인 속성이 다르다.
4차산업혁명 = 3초(초지능, 초예측, 초연결)



탄력근무 = 주40시간 범위내 시간적 유연성 부여
[탄력근무 : 시차출퇴근, 집약, 재량 등
원격근무 : 재택, 스마트워크



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: 매3년, 과기부 장관
전자정부기본계획 : 매5년, 행안부장관
정보기술아키텍처기본계획 : 매3년, 행안부장관
*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→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(2020.12)



[1.0 [2.0 [3.0
전자정부 유선; 무선; 유무선통합
정부운영패러다임 직접방문 유선; 무선;



[2020 기본계획(1차) : 2016 ~ 2020
2025 기본계획(2차) : 2021 ~ 2025

1 정부규제

- ①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 규제의 존속기한(규제일몰제)은 원칙적으로 년이다.
- ②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20~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 5 2**2 정책의제 설정상 오류**

- ☆ ①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는 종 오류이다.
- ☆ ② 문제를 잘못 정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오류는 종 오류이다.
- ☆ ③ 틀린 귀무가설을 인용하거나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는 종 오류이다.

 1

■ 옳귀기 - 1종오류

 3 2**3 비용편익분석**

- ☆ ① 순현재가치가 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.
- ☆ ② 편익비용비율이 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.
- ☆ ③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으로, 편익비용비율을 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말한다.

 0

순현재가치 : B - c

 1

편익비용비율 : B/C

 0 1

내부수익률 : B와 C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

4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

- ☆ ① 쓰레기통모형과 전제조건이 유사한 관료정치모형은 Allison의 모형 이다.
- ☆ ② 합리모형과 전제조건이 유사한 합리적행위자모형은 Allison의 모형 이다.

 3 1

37 주민참여제도

- ☆ ① 우리나라에서 주민청구제도는 □년, 주민투표제도는 □년, 주민소송제도는 □년, 주민소환제도는 □년에 각각 도입되었다.
- ☆ ② 지방자치단체의 □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□명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□명, 기타 시·군·구는 □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□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-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□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⑤ □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거쳐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지방의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□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
1999 | 2004
2006 | 2007

18 | 300
200 | 150

「지방자치법」, 2022.1.13. 개정·시행

3

60

18

1

「주민조례발안법」 제정(2021.10.19.)
시행(2022.1.13.)

38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

- ☆ ①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□년 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투표로도 변경할 수 없다.
- ② 지방의회는 재적 □ 출석과 출석 □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☆ ③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□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□ 득표로 확정된다.
- ☆ ④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주민은 □일 이내에 상급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, 소청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□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2

과반수 | 2/3

1/3

과반수

14

10